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 새 정부의 5단계 대북정책 추진 전략 제언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새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정책'을 제언한다. 국민과 남북,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근간이다. 정책 목표는 남북관계 제도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물류시대 개막, 풀뿌리 남북관계 구축 등이다. 추진 원칙은 소통과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3불용 원칙'이다. 북핵 불용, 무력 불용, 일방주의 불용 등이다. 추진 과제는 인도주의 문제 해결, 사회문화 교류, 남북기본협정 체결,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접경지역 개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남·북·중·러 물류교류, 풀뿌리 협의체 구축, 북한인권 개선 등 10대 과제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는 남북관계의 잃어버린 9년이었다. 남북관계 복원이 시급하다. 남북 당국 간 불신의 벽이 높고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효과적이다.

1단계(2017)에서는 신뢰 회복 및 분위기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에 피로감이 쌓여 있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흡수통일을 경계하고 있다. 남한은 김정은 체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북한은 적화통일 및 군사적 도발 행위를 포기해야 양측 간 정치적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연락채널 복원,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 특사 상호 교환 방문, 10·4 정상선언 10주년 및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평창올림픽과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남북체육회담 개최가 필요하다.

2단계(2018)에서는 남북관계 복원 및 6자회담 재개가 중요하다. 남북관계를 총괄·조정하는 장관급회담이 개최돼야 한다. 민간급 교류를 통한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 하반기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비핵화·평화협정·남북기본협정·새로운 협력 사업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6자회담 재개도 필요하다.

3단계(2019)는 새로운 협력 사업 추진과 정치·군사 문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0대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사업을 펼쳐야 한다. 한반도 긴장 완화 및 국군포로·납북자 등 근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화도 이끌어야 한다. 북핵 문제는 한미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는 중국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 내 4자 평화포럼 또는 평화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4단계(2020)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실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한반도 평화시대 선언'이 필요하다. 4자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군사정전협정을 대체할 잠정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6자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하는 선언(종전 선언)도 해야 한다.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비핵화와 병행적 단계적 추진이 현실적이다.

5단계(2021)는 대북정책 추진 성과 및 한반도 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제반 문제 및 한반도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다음 정부에게 인계해야 한다.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불안정하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 이익을 중심에 놓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패권 경쟁에 집중한다.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남북 간 및 북미 간 주고받는 말폭탄은 전쟁 수준이다.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가 되고 남과 북은 이방인이 된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을 반복할 것인지 새로운 한반도를 개척할 것인지 중요한 경계의 지점에 있다. 남북관계가 좋으면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은 협조자가 된다.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정책'은 소통의 시대정신, 한반도의 이중성격, 평화통일의 미래 비전,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전략이 담겨 있다. 국민과 남북이,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평화 정책'은 새로운 한반도의 개척을 담보한다.

종교칼럼

# 부활의 두 여인

조발그니
서산동성당 주임신부

4월16일 교회는 부활예식을 했다. 이날은 세월호 3주기이기도 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알았을까? 예수님이 죽어 제자들이 실의에 빠진다. 이젠 어찌할 수 없다 생각하며 포기했을 것이다. 무덤에 갈 용기조차 없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이다.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설마 그분이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당히 내려올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망연자실'이란 말이 이들에게 어울리는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두 여인은 이들과 달랐다. 두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기에 너무나도 자신들의 삶이 허망해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했다. 사실 잃을 것도 빼앗길 것도 없는 여인들이었다. 그래서 주먹이라도 쥐어보자 생각하며 무덤을 찾아간다.

나는 이 여인들을 3년 전 팽목항에서 만났다.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본다고 아이들이 돌아오지는 않을 텐데 하염없이 바다를 지키는 엄마들, 아이가 돌아오면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보려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엄마들, 하느님께 소리 내어 기도하는 엄마들, '신부님 우리 아이 착한데 하느님은 왜 그러냐'고 가슴을 두드리며 외치는 엄마들, 며칠씩 굶은 것도 잊은 채 아이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거리는 엄마들, 그 여인들은 삼 년이 지나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지치지 않고 했다.

부활은 그들에 의해 알려졌다. 예수님의 죽음에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자들이 아니라 잃을 게 없어서 아무것도 않으면 미칠 것 같았던 그 여인들에 의해 알려졌다. 또한 모두에게 버림받았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죽을 위험에 놓였던 그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며 사람으로 대해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들을 움직이게 했을 것이다. 세월호도 마찬가지다. 그 엄마들이 팽목항에서, 광화문에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했던 것은 자식에 대한 애절한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엄마가 너희들을 구해내지 못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 엄마들의 외침이 새로운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외침을 가져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활은 이 힘없는 세월호 엄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빠, 소녀상을 지키는 소녀들, 촛불을 든 힘없는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1991년 교황 바오로 2세는 교황 레오 13세가 1891년 회칙 '새로운 사태'를 공표한 지 100주년을 맞아 회칙 '백주년'을 발표한다. 제자들의 망연자실한 행동은 정치인들의 정치일탈에서 비롯한다고 회칙 '백주년'은 말하고 있다.

"사회로부터 요청되는 것은 정의와 윤리의 기준에 따라 검토되지 않고, 그 요구를 내세우는 집단들의 선거 영향과 재정적 계산을 위해서 검토된다. 이러한 정치적 행위의 일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신과 무관심을 낳으며, 그렇기 때문에 당하고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참여가 감소되고 시민 정신이 쇠퇴한다."(47항)

박근혜 정부 4년을 산 국민들은 우리의 무관심이 얼마나 큰 재앙 가져왔는지를 몸소 체험했다. 더 잃을 것이 없는 시민들이 일어나 무덤을 찾아가고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이들을 응원한다.

"교회는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는데, 이 체제는 확실히 시민들에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며, 피지배자들에게는 지배자들을 선택하거나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평화적으로 대치할 가능성을 보장해 준다. 따라서 교회는 사적 이익이나 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 체제를 점령하고 폐쇄된 지배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면 안 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올바른 인간관의 기초 위에 성립한다. 민주주의는 참된 이상에 대한 교육과 양성을 통한 참여와 공동 책임 구조의 설립을 통한 사회 주체성의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조건들이 채워지기를 요구한다." (백주년 47항)

나의 한 표가 이 나라를 부활시킬 것이다. 선거를 하는 것만이 지배자들을 선택하고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대치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선거 참여이다. 우리나라의 부활에 나의 힘을 보태자.

기 고

# 3대 개혁 입법 국회 합의통과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자

정 운 채
전 광주시 기획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정치권은 국가개혁을, 국가개조를 외쳐오다가 이제 유력 대선 주자들은 적폐청산만을 외치고 있다. 대선주자 TV토론에서 보여준 '文·安'의 적폐 논쟁은 '또 다른 5년 내전'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다른 후보들이 추격하는 양상이어서 누가 이기든 적폐세력으로 매도당한 패자나 적폐세력에 정권을 빼앗긴 패자가 쉽사리 승복할 리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안' 양강구도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실패의 반사이익이며 1600만 촛불민심의 등에 무임 승차한 결과다. 따라서 친박세력 또한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아 실패를 획책할 것이다. 이를 탓할 수도 없다. 따라서 '또 다른 5년 내전'이 예고돼 있는 것이다. 섬뜩하고 허무하고 잔인하다.

그렇다면 1600만 촛불은, 깨어있는 5000만 국민은 통상의 방법이 아닌 방편을 써야 한다. 첫째로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치개혁입법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째로 공정하고 역동적인 시장경제 시스템구축을 위한 경제사회 개혁입법으로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셋째로 국민기본권 보장 개혁입법으로 '의무이행소송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들 3대 개혁입법을 대선 전 국회에서 합의통과시킬 것을 유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지금 바로 즉시 명령해야 한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재벌·대기업 등 기득권층을 대변할 수 있는 '보수 정당', 노동자·농어민·자영업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진보 정당', 보수와 진보를 이어줄 수 있는 '중도 정당'을 제도적으로 출현토록 하자는 것이다. 승자독식이 아닌 '보수와 중도', '진보와 중도'의 연립정부가 제도적으로 탄생하도록 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경제활동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칙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징벌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사회를 구축하자는 제도이다. '의무이행소송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 침해 구제 신장을 국가가 이행하도록 법원의 판결로 강제하자는 제도이다.

3대 개혁입법은 글로벌 표준이다. 이미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은 2015년 7월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국회에 공개 제안했고,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을 시도했다. '의무이행소송제'도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됐다. 따라서 정치권이나 국회 모두 이들 3개 개혁입법의 타당성을 잘 알고 있다.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페이스북 공개그룹 '민주인권평화 100만 국민연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8월 14일부터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여, 3대 개혁 입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정치·자본권력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우리 정치가 탄핵당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권이 먼저 성찰하고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새 출발을 위한 적폐청산은 사람보다 제도가 만든 적폐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이 진정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그들이 외쳐왔던 국가개혁·국가개조에 걸맞은 개혁입법을 마련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속이고 대권을 잡아 승자독식의 패거리 정치를 또 한 번 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에게 선택받기 위해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유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지금 바로 즉시, 국회 합의통과를 명령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1600만 촛불 명예혁명은 완결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런 긴급처방을 쓰지 않는다면, 1960년 4월 항쟁이 박정희 정권으로, 1987년 6월 항쟁이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갔듯 실패의 역사, 미완의 전철을 반복할 것이다. 프랑스혁명, 영국 청교도혁명이 그랬다.

우리의 현실은 또 한 번의 실패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나라를 잃었던, 120여 년 전 갑오개혁 전야와 똑같은 난국이기 때문이다.

대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 시점에서 3대 개혁 입법 통과를 과연 누가 어떻게 실행에 옮기도록 할 것인가. 민주화의 성지,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민들이 앞장서야 한다. 국민 열망이 모이면 촛불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시 켜질 것이고 대선 주자들도 거리와 시장에서의 호객행위, 혐오스런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접고, 여의도 국회로 돌아가 머리를 맞대고 3대 개혁 입법 합의 통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합의 통과과정이 곧 선거운동이 되도록 유권자인 국민이 바로 잡아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명예혁명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社 說

# 온 국민 관심 집중된 대선 후보 TV토론

"보는 내내 '저 사람들(대선 후보들) 대체 뭐 하는 거야!' 싶더라. 토론을 보면 볼수록 대선에 대해 더욱 막연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거참…'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 그제 밤 이뤄진 '대선후보 TV토론회'를 본 어느 영화배우(곽도원)의 관전평이다.

그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 시청률 전국 26.4%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지만 내용은 그리 알차지 못했다. 그럼에도 후보들의 수준 그리고 민낯이 그대로 노출돼 그런 대로 의미가 아주 없진 않았다.

대선 후보 5명이 참여해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은 사상 처음으로 후보들이 사전 원고와 자료 없이 최장 18분 동안 상대를 선택해 질문을 던지고 토론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었다. 앞선 토론회와 달리 실시간 토론을 통해 후보들의 모습이 유권자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었다.

기선 제압을 위해 격론이 벌이며 서로 말을 끊기도 하는 등 토론회 열기도 뜨거웠다.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말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비껴갔다. 유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 대북송금의 공과 과를 묻는 과정에서 답답하다는 듯 답변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공방이 오고 가자 심 후보는 "대북송금이 몇 년 된 얘기냐. 선거 때마다 같은 얘기를 하느냐"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표정과 발언의 동요도 있었으며 치열한 분위기 속에 실수하는 장면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즉문즉답 상황에서 후보들은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유권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후보들의 됨됨이를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었다. 또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던 과거 TV토론과 달리 현안에 대해 반복적이고 심층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덕분에 후보 개개인이 현안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했는지 또 적절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몇 차례의 토론이 남아 있다. 각 후보의 실력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심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을 직접 대하기 어려운 유권자들로서는 그들의 면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 탄흔 분석 통해 헬기 난사 사실 드러났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일빌딩 내부를 향해 계엄군이 헬기에 거치된 기관총을 난사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엊그제 전일빌딩 총탄 흔적 법안감정(2차)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일빌딩 10층 내부 총탄 흔적은 헬기에 거치 된 기관총 사격에 의해 생성된 것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이어 "금남로 상공에 헬기가 호버링(hovering ·정지비행) 상태로 떠 있었고, 탑승한 군인들이 거치돼 있던 기관총을 좌우로 돌리면서 사격했다고 보는 게 과학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국과수 총기안전실장은 "10층 내부에서 확인된 부채꼴 모양의 탄흔 분포를 보면, 소총병이 총기를 들고 탄창을 갈아 끼우며 쏴서는 생길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국과수가 낸 1, 2차 감정서와 김 실장의 이번 발언을 종합하면 전일빌딩 10층 건물 내부에서 확인된 170여 점의 탄흔은 UH-1 헬기 양쪽 문에 거치 된 M 60 기관총에 의한 난사의 흔적이 명백하다. 이번 발표는 계엄군이 전일빌딩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과학적 연구결과로 뒷받침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결정적 물증인 총탄이 발견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계엄군의 헬기 난사가 드러난 만큼 이제는 발포 명령자와 경로를 추적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때다. 헬기 난사는 5·18 학살의 실체를 밝혀내는 또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다. 당시 출동했던 헬기는 물론 조종간을 잡았던 관련자 등의 양심적인 증언을 기대한다.

無 等 鼓

## 동상 철거

1970~80년대 우리 초등학교(당시엔 국민학교) 교정에는 단군 할아버지와 유관순 누나, 반공소년 이승복 등의 동상이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여기저기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점점 사라지더니 요즘 초등학교에선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도 곳곳에 동상이 들어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상=우상(偶像)'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나 거부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들 동상이 상징해 온 '시대정신'이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난 2013년 12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구소련 통치의 상징'인 레닌 동상이 철거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시위대는 '소비에트 점령의 종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언론들도 독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에 비유하며 '새 시대의 시작'이라며 추어올렸다.

개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서 동상이 철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제스(蔣介石) 전 총통 서거 42주년을 맞은 대만에선 최근 장제스 동상의 머리를 잘라내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대만의 초대 총통인 장제스는 대만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그런 사람의 동상이 훼손되는 것은 '대만독립'노선을 추구하는 민진당이 지난해 정권을 잡으면서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기 때문이다.

대만에선 지난 1947년 2월 언론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소요가 발생했었다. 당시 중국 본토에서는 군대를 파견해 강경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2만여 명의 대만 원주민이 학살당했다. 민진당 정권은 이 사태의 원흉이 바로 장제스였으며, 이제 과거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 전용 별장이었던 청남대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청남대에는 역대 대통령 9명의 동상이 실물 크기로 설치돼 있다. 애초 박 전 대통령의 동상도 세워질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동상 건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개인에 대한 평가도 최저인 박 전 대통령의 동상 자리를 아예 비워 놓는 것은 어떨까?

/홍행기 사회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 | | |
|---|---|---|---|---|---|---|---|
| 편집국안내 | | 경 제 부 | 220-0663 | 경영지원국 | 220-0515 | 문화사업국 | 220-0541 |
| 〈대표 FAX | 222-4918〉 | | 〈FAX 222-4938〉 | | 〈FAX 222-8005〉 | | 〈FAX 222-0195〉 |
| 편 집 부 | 220-0649 | 문 화 부 | 220-0661 | 기획관리국 | 227-9600 | 독자서비스국 | 220-0551 |
| 정 치 부 | 220-0632 | 문화미디어부 | 220-0664 | | 〈FAX 227-9500〉 | | 〈FAX 222-0195〉 |
| 사 회 부 | 220-0642 | 체 육 부 | 220-0697 | 디 자 인 실 | 220-0536 | 서 울 지 사 | 02-773-9331 |
| 사 회 2부 | 220-0652 | 사 진 부 | 220-0693 | | | | 〈FA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